한농연중앙연합회 농정이슈 보고서 2012-02 2012/05/07

경제민주화와 연계된 FTA 무역이득 공유를 위한 정책 제언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경제 여건
Ⅲ. FTA 체결로 인한 이득과 피해 현황 (한-EU, 한-미 FTA 중심으로)
Ⅳ. FTA 농어업분야 피해 계측 및 지원 대책의 문제점
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경제민주화와 기업체의 농어업 분야 지원 정책 강화의 필요성
Ⅵ. 정책제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 이 보고서의 내용은, 2012년 5월 7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연계된 FTA 무역이득 공유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된 주제발표문의 전문임을 말씀드립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보도하시기를 원하시거나 그 밖의 문의를 원하실 경우에는,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박상희 실장(070-7165-0005, kwak121@chol.com)에게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들어가며

□ 정치권에서의 가장 큰 아젠다는 경제민주화임. 경제민주화에 대한 총론 및 각론에 대해 여·야, 진보·보수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임. 우리 농어업계는 현장 농업인들이 ▲기회의 평등, ▲분배 불균형(양극화 심화), ▲의사결정 참여 등이 박탈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업계의 경제민주화가 가장 시급한 현실임

□ 특히, 농어촌 현장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는 도·농간 양극화, 농·농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임.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규제, 지원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에 대해 양극화 해소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규모화 정책[1]과 농수산식품 예산 축소[2]는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농어업 강대국인 미국·EU와의 FTA 체결과 중국화의 FTA 추진은 농어업·농어촌 위기를 더욱 위기를 내몰고 경제민주화에 더욱 역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더욱이 농어업 희생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FTA 추진은 많은 사회적인 저항[3]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이에, 정부의 동시다발 FTA 추진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제조업

---

1)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들에게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면서 농어촌의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음.

2) 2012년 국가 전체 예산은 약 326조원으로 2011년 비해 5.3% 증가했는데 비해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약18조원으로 2011년에 비해 2.7% 증가하는데 그침. 특히 FTA 대책, 농협신경분리, 4대강 예산을 제외하면 오히려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줄어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임.

3)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011년 한해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300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함.

분야가 피해를 보는 산업인 농어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합치를 높이고 농어업의 경제민주화를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음

2.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경제 여건

1). 농어업 분야 경제 여건[4)]

가. 농·농간 양극화

□ 작년 평균 농가소득은 3,212만 1천원이었고 이 가운데 상위 20% 미만의 평균소득은 7,731만 8천원, 20~40% 미만 3,663만 8천원, 40~60% 미만 2,417만 5천원, 60~80% 미만 1,579만 4천원, 80~100% 660만 1천원 등이었음. 이에 따라 농가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하위 20% 소득의 11.7배나 됨

□ 반면에 작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은 4,809만 2천원이었고, 상위 20% 미만 평균소득은 8,778만 8천원, 20~40% 미만 5,668만 1천원, 40~60% 미만 4,358만 1천원, 60~80% 미만 3,285만 3천원, 80~100% 1,947만 6천원 등이었음.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상위 20% 평균 소득이 하위 20%의 4.5배임

4)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년 농업전망

나. 도·농간 소득 격차

□ 도시근로자의 명목 가구소득은 증가 추세이지만, 농가소득은 2006년 이후 정체 내지 감소 현상을 보이면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6년 92.6%에서 2010년에는 76.7%로 격차가 확대되었음

- 농가소득은 2003년 이후 연평균 2.6%(명목소득) 증가한 반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4.7% 증가하여 도·농간 소득 격차가 확대

다. 농업경영비 비중의 변화

□ 2003년 이전에는 농업소득이 농업조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비용 상승으로 경영비 비중이 높아져 2010년에는 농업소득 비중이 37.1%로 전년 대비 1.8% 상승

□ 최근의 농업경영비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 상승,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과 같은 투입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경영비가 상승함
-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생산 방식이 자가 노력 중심에서 자본재 의존형으로 전환되면서 중간투입재 비용 상승과 고용 노임 증가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의 농업경영이 일반화되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의 농업경영비 증가 속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농가의 경영비 상승률이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농업조수입 연평균 증가율(1990-2009): 한국 3.78%, 일본 1.26%
- 농업경영비 연평균 증가율(1990-2009): 한국 6.38%, 일본 2.00%

□ 영농형태별 농업경영비 동향

- 영농형태별로는 논벼, 과수, 축산, 채소 농가 순으로 농업경영비 비중이 증가하여 부담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축산 농가는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부담으로 경영비 비중이 2010년에 69.9%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라. 농가부채 동향

□ 농가부채는 1990년대에 빠르게 증가하다가 2004년부터 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되면서 안정되는 추세를 보임

- 농가경제통계에서 조사한 호당 평균 부채는 2005년 27,210천원에서 2007년 29,946천원으로 증가. 이후 2008년에는 25,786천원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에 27,210천원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호당 평균 부채를 전체 농가 수로 환산하면 총 부채액은 32조원으로 추산됨

<농가부채 및 자산 동향>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가부채(a)	27,210	28,161	29,946	25,786	26,268	27,210
농가자산(b)	298,178	356,963	395,981	341,227	358,029	372,476
장기상환능력 (a/b*100)	9.1	7.9	7.6	7.6	7.3	7.3

* 단위 : 천원 , %

* 주 : 자산 대비 부채 비율(부채/자산*100)이 하락할수록 장기 상환능력이 향상됨.

*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 제조업 분야 경제 여건(대기업 중심으로)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친기업 정부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 등 제조업 분야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음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35개 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변동현황 등을 조사하였음

□ 2007년 4월에는 35개 집단에서 총 812개 계열사를 보유하였으나, 2011년 4월 현재에는 1,205개로 지난 4년 사이 393개가 증가하였음(증가율 48.4%)

- 대기업 집단별 평균 계열사 수도 2007년 4월에는 23.2개였으나, 2011년 4월에는 34.4개로 11.2개 증가하였음
- 35개 대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2007년 4월 672.3조원이었으나, 2011년 4월에는 1,189.1조원으로 76.9%인 516.8조원 증가하였음

□ 대기업집단별 평균 자산규모도 07년 4월에는 19.2조원에 불과하였으나, 11년 4월에는 34조원으로 14.8조원 증가하였음

- 35개 대기업집단의 매출액도 2007년 4월에는 690조원이었으나, 2011년 4월에는 1,153.8조원으로 불과 4년 만에 67.2%인 463.8조원 증가하였음

□ 대기업집단별 평균 매출액도 19.7조원에서 33조원이나 증가하였음

3. FTA 체결로 인한 이득과 피해 현황 (한-EU, 한-미 FTA 중심으로)

1) 한-EU FTA

가. 이득(수혜) 현황

□ 한-EU FTA 협상 결과 관세 철폐의 효과로 향후 15년간 제조업 對EU 수출은 연평균 25.2억 달러 수입은 21.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14.1억 달러), 전기전자(3.9억 달러), 섬유(2.2억 달러) 순으로 증가

<한 • EU FTA체결에 따른 對EU 수출 증가액>

(단위 : 백만 $)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자동차	1,407	1,072	1,574	1,574
전기전자	394	345	418	418
섬유	216	216	216	216
기계	116	107	120	120
석유화학	108	104	110	110
생활용품	77	66	82	82
정밀화학	53	52	53	53
비철금속	10	9	10	10
철강	7	7	7	7
선박	4	4	4	4
제조업 전체	2,520	2,110	2,725	2,725

자료 : 외교통상부

□ 관세 철폐에 따른 순수출 증가 등으로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5조원 수준 증대 효과가 예상됨

-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증가 효과(1.9조원)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섬유(0.1조원), 철강(0.08조원) 순으로 예상됨

<한 • EU FTA체결에 따른 제조업 부문 생산 증가액>

(단위 : 백만 $)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자동차	19,432	14,345	21,951	21,951
섬유	1,124	1,1562	1,124	1,110
철강	842	303	1,087	1,083
생활용품	453	276	535	535
전기전자	273	△73	444	430
석유화학	140	240	88	86
선박	△164	△131	△186	△186
비철금속	△395	△383	△395	△396
정밀화학	△2,483	△2,087	△2,693	△2,693
기계	△2,456	△2,245	△2,564	△2,578
제조업 전체	15,156	9,791	17,772	17,718

자료:외교통상부

나. 피해 현황

□ 향후 15년간 농업 분야 對EU 수출은 연평균 약 700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약 3,75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776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가운데 돼지고기 낙농품 등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는 연평균 1,649억원으로 전체의 약 93%를 차지함.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은 쇠고기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을 초래 할 것으로 전망됨

<품목별 생산 감소액>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감자전분	10	0	8	23
돼지고기	828	328	943	1,214
닭고기	218	105	231	319
낙농	323	40	277	651
포도(가공주스)	32	32	32	32
키위	42	18	43	63
토마토(가공)	42	23	52	54
쇠고기	280	58	279	501
합계	1,776	604	1,865	2,857

자료 : 외교통상부

2) 한-미 FTA

가. 이득 현황

□ 관세 인하 등의 효과로 향후 15년간 對 세계 수출은 연평균 31.7억 달러가 늘어나지만 수입은 1.4억 달러에 증가에 그쳐 무역 수지 흑자가 30.3억 달러로 크게 늘어날 전망됨

< 한•미 FTA에 따른 對세계 수출입 증가액>

(단위 : 백만 달러, 15년 평균)

	수출	수입	무역수지
자동차	1,171	41	1,131
전기전자	826	△32	858
섬유	138	13	125
일반기계	179	28	152
화학	311	21	291
철강	34	△6	40
기타	508	75	433
제조업전체	3,167	138	3,029

자료 : 외교통상부

□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와 생산성 향상 등으로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8조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증가 효과(2.9조원)가 가장 크고 전기전자(2.0조원), 화학(0.9조원) 순으로 생산 증가가 크게 나타남

<한 • 미 FTA체결에 따른 제조업 생산 증가액>

(단위 : 억원, 15년 평균)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자동차	28,813	13,061	36,419	36,960
전기전자	20,490	10,327	25,390	25,755
섬유	3,006	1,968	3,431	3,619
일반기계	5,607	2,697	7,026	7,099
화학	9,007	4,200	11,118	11,702
철강	5,073	2,450	6,333	6,437
기타	15,695	7,546	19,224	20,412
제조업 전체	87,691	42,249	108,941	111,984

자료 : 외교통상부

나. 피해 현황

□ FTA 협상에서 피해액에 따라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피해재원 마련 등 대응책 수립에서도 피해액은 중요한 참고자료임.

-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15년간 농업부문 피해액이 12조 2,252억원이고, 매년 피해액이 8,150억원임
-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은 연평균 4억 2,4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미국 ERS 19억달러 추정)

<한-미 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

단위 : 억원

구분		연간			평균			15년 합계	15년 평균
		5년차	10년차	15년차	1~5년	6~10년	11~15년		
곡물	보리	11	23	45	7	18	35	295	20
	두류	164	177	202	118	171	191	2,399	160
	기타	31	49	49	21	46	49	576	38
	소계	206	249	295	146	234	274	3,270	218
채소특작	마늘	31	38	53	31	35	46	560	37
	양파	24	49	106	19	37	79	674	45
	고추	111	145	158	98	133	156	1,934	129
	과채류	372	412	412	263	395	412	5,348	357
	인삼	25	42	57	20	35	51	531	35
	기타	45	56	68	41	52	63	781	52
	소계	608	742	853	472	686	808	9,828	655
과수	사과	599	672	760	484	636	732	9,260	617
	배	396	454	498	293	437	480	6,052	403
	포도	439	585	731	326	526	673	7,625	508
	감귤	665	730	730	461	727	730	9,589	639
	복숭아	150	221	221	122	191	221	2,671	178
	기타	66	72	72	51	71	72	965	64
	소계	2,314	2,735	3,012	1,737	2,586	2,909	36,162	2,411
축산	쇠고기	1,040	2,463	4,438	594	1,836	3,577	30,036	2,002
	돼지고기	1,640	2,065	2,065	1,008	1,803	2,065	24,378	1,625
	닭고기	589	1,087	1,087	389	836	1,087	11,557	770
	유제품	297	430	430	259	372	430	5,306	354
	기타	91	143	173	64	116	163	1,716	114
	소계	3,656	6,187	8,193	2,314	4,963	7,322	72,993	4,866
총계		6,785	9,912	12,354	4,668	8,470	11,312	122,252	8,15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FTA 농어업분야 피해 계측 및 지원 대책의 문제점

1) FTA 농어업분야 피해 계측의 문제점[5]

□ 수입산에 대한 국내 소비자 선호도가 변하면 피해액도 증가함

- FTA에 따른 피해액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인구, 환율, GDP, 물가지수 등과 같은 거시변수에 대한 가정은 물론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요 및 공급탄성치, 수입산에 대한 교차탄성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을 도입하였음
- 임정빈 외(2011)가 밝힌 것처럼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생산비, 환율, 물류비 및 상대국의 수출가격(국제 가격) 등의 변화에 따라 실제 수입량이 다를 수 있음
-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및 공급탄성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가만하면 FTA 피해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수입산과 국산과의 대체 정도를 나타내는 교차탄력성이 중요함
- 분석기간 교차탄성치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첫째, 수출국이 수입시장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우, 둘째, 수입국 소비자들이 수입산에 입맛을 들여 국산과의 차이를 덜 느끼는 경우임. 만일 교차탄성치가 늘어나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 국내 농업에 대한 피해도 크게 나타날 것임
- 품목에 따라서는 교차탄성치가 분석 기간 동안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할 필요가 있음

5) 피해계측에 대한 문제점은 2011년 민주당 토론회에서 권오복박사 발표한 자료를 인용·활용하였음

□ 농수산업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해야 함

- 현재 정부의 피해액은 농산물의 생산액 감소만을 계산한 것이지만 농축수산업 전후방산업과 농업기반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 FTA 이행으로 농업생산이 위축되면 농자재 산업과 같은 후방 산업은 물론 국산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업 등 전방산업도 위축됨
- 2010년 서울대 안동환·임정빈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로 국내 농업생산이 위축되면 15년차를 기준으로 농업과 비농업 분야를 합해 약 4조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15년차에 농업 부문 1조 8,046억원, 제조업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다른 산업에 2조 1,419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6)]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상실 효과 또한 분석해야 함

- FTA로 인해 농업생산과 소득이 감소할 경우 지금까지 개발된 계량모형으로는 계측이 불가능한 경제외적인 충격 즉, 심리적 충격이나 불안감에 의한 영농의욕저하, 미래에 대한 희망 상실, 후계인력의 진입 부진 등에 대한 효과도 고려해야 함
- FTA로 인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약화될 것이란 점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일차적으로 농업생산을 통해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홍수조절, 대기정화, 유기성폐기물 분해 등과 같은 환경보전 기능과 농촌경관 및 농촌 활력제공, 전통문화 유지, 식량 안보 등과 같이 외부경제효과를 가져다주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로서 2007년 농촌진흥청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농업은 67조 7천억원의 공익적 가치가 있음
- FTA로 인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상실분을 계산하여 일부 산업의 이

6)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한미 FTA 15년차에 농업분야 피해를 1조 2658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익을 위해 FTA를 추진한 결과 농어촌, 농어민, 식량주권 등에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 경우 농업의 다원적 기능 상실분이 연간 3조 7000억엔(약 54조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수출국들이 FTA 관세 철폐에 따라 관세 철폐에 따른 이득분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경우 FTA로 인한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음

- 실제, 미국 농무부는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에 향후 5년간 1,000만달러의 쇠고기 홍보 판촉 예산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보임

2) FTA 국내 대책의 문제점

□ 정부가 FTA를 체결하고 발표하는 국내 대책은 FTA 추진과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 과제임

- 실례로, 한미FTA 주요 대책들을 살펴보면 수출인프라 구축,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농촌활성화 대책 등이 이는 기존 농림수산식품 정책으로 추진되거나 해야 할 정책임
- 현장 농업인들은 기존의 농업 정책과 별개로 농업 개방에 따른 별도의 정책이 시행되고 예산이 책정되기를 원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2011년 대비 2012년 국가예산 증가율은 5.3%인데, 농림수산식품예산 증가율은 2.7%임

□ 현장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현실성 없는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대표적인 무역조정지원제도인 피해보전직불제는 매우 까다로운 발동요건으로 인해 발동한 사례가 전무하여 사문화가 되고 있음. 실제,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도입된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한 사례가 없어 관련 예산이 모두 불용처리되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피해보전직불제가 우선 7년이라는 한시성, 그리고 점진적 관세 인하 등을 감안하면 갑자기 조수입이 줄어들기가 쉽지 않음
- 예컨대 최근 5개년 평균 가격이 100만원인 A농산물이 미국 농산물 수입 급증으로 100만~90만원으로 떨어지면 직불제는 작동되지 않음. 그나마도 89만원으로 떨어지면 90만원(기준가격)과 89만원과의 차액 1만원 중 9,000원(90%)을 농가에 지원하게 됨

□ 특히, 농산물 가격이 20% 하락하면 품목에 따라 30~60% 내외로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클 수밖에 없음

- 아울러, 피해보전직불제는 가격이 1~10% 하락하면 발동되지 않기 때문에 농어민들에게 지원되지 않고 불용됨

<가격 20% 하락시의 소득감소율>

품 목	소득률	소득감소율	품 목	소득률	소득감소율
한육우	33	61	포도	73	27
낙농	47	43	사과	68	29
양파	74	31	대두	72	28

자료 : 농촌진흥청, 표준소득자료

5.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경제민주화와 기업체의 농어업 분야 지원 정책 강화의 필요성

1) 농림수산식품분야의 경제 민주화 필요성

가. 농·농간 양극화 심화로 기회 평등 박탈

□ 대한민국 사회가 양극화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농어촌 지역 임.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상위 20% 평균 소득이 하위 20%의 4.5배 이지만 농가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하위 20% 소득의 11.7배나 차이가 남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규모화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자금이 대농들 위주로 자금이 집행되어 소농들의 경우 아예 기회를 잡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임. 예컨대, 정부의 정책 자금의 경우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력[7]이 필요한데, 소농의 경우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을 받지 못해 농어업에 대한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도·농간 양극화 심화로 소득 불균형이 심각함

□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6년 92.6%에서 2010년에는 76.7%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7)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의 60%~80% 수준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음. 이에 실거래가 3억원하는 농지라도 공시지가가 1억원인 경우는 6,000만원~8,000만원 밖에 대출을 받지 못함. 그나마도 농지 등 담보력이 있는 농어민들에게 정부의 자금 등이 집중 될 수 밖에 없어 농어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임

□ 이처럼 도·농간 소득 분균형으로 인해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건강 추구 권리[8]병원 등 의료 시설 부족), 교육(학교 통폐합 및 교육 시설 부족), 삶의 질(여가 선용 시설 등)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

다. 의사결정 참여의 박탈

□ 우리나라의 경우 거버넌스 체계는 걸음마 수준 임. 특히, 동시다발 FTA로 이해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농어민들의 참여 및 의사가 배제되어 많은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음

□ 한미FTA 협상의 경우 개시하시 하기 하루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요식행위라는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였고, 이는 한미FTA 협상의 전체 불신으로 이어짐

□ 참고로, 미국의 경우 협상 초기부터 이해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회 합치의 가능성이 높고 무역조정제도인 TAA 제도를 통과시킨 이후에 비준안을 통과시킴

2) 기업체의 농어업 분야 지원의 필요성

가. 정부의 재정과 별도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 함

□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

8)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분만실이 없는 지자체는 55곳 임. 경기 과천시와 연천군을 비롯해 경북 11곳, 경남 9곳, 전남 8곳, 전북 7곳, 강원 6곳, 충북 6곳 등에는 분만실이 아예 없음

를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와 실행 동력을 국가가 만들어야 함. 이를 중립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농·농간, 도·농간 기회 균등 및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와 개입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축소되어 왔고 향후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큼

<국가 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증가율>

연도별	국가전체 총지출	농림수산식품 분야 총지출	비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지출	비중(%)
'08년	2,572,000	159,636	6.2	**139,549**	**5.4**
'09년	2,845,000	168,549	5.9	**146,363**	**5.1**
'10년	2,928,000	172,571	5.9	**146,738**	**5.0**
'11년	3,091,000	176,354	5.7	**148,644**	**4.8**
'12년	3,254,000	181,322	5.6	**154,083**	**4.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오히려, 외국산 농축수산물의 수입 증가 및 FTA 확대 등으로 국내 농업과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세 수입의 농업 부문 지원액은 낮은 수준임

<연도별 축산물 수입관세의 축산부분 지원액>

(단위 : 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추정
농특회계 전입 축산물수입관세		6,990	7,996	9,450	10,300
축산부문지원액 (비율)		**2,049 (29.3)**	**1,469 (18.4)**	**2,121 (22.4)**	**2,734 (26.5)**
	농특회계사업	2,049	1,469	2,121	1,629
	FTA기금			(유보: 1,091)	1,105

※ '06년 대비 '09년 현재 수입관세 증가액(율) : 3,310억원(47.4%)증가

※ '06년 대비 '09년 현재 축산부문 지원액(율) : 685억원(33.4%)증가

<자료 : 농협중앙회>

□ 아울러,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투자 규모는 동 산업을 통한 GDP 대비 1.7%에 불과함

□ 더욱이 지원 규모가 1~2억 원 수준의 소규모 과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국토해양(29억 원), 지식경제(25억 원), 문화관광(10억 원)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규모화를 통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기에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백화점식 지원은 투자 효율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연구대상 기술 분야기 1차 생산 관련 분야(35%)에 집중되어 있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신기술 분야인 IBNT(정보기술+바이오기술+나노기술)융복합(6%), 바이오(11%), 식품산업(11%) 분야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실정임

□ 농어업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정부 재정지출 계획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FTA로 추가적인 이득을 창출하는 기업들

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함

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우리나라는 통상을 통해 성장하여 왔다면 반대로 통상을 통해 우리 농수산업계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실제, WTO 협정에 따라 회원국들의 무수히 많은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는데, 수출을 늘리기 위해 체결 된 농업 강대국과의 FTA[9]로 인해 외국 농산물 수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임

□ 이처럼, 국가의 경쟁력 향상과 제조업 분야 성장을 위해 우리 농수산업계가 많은 희생을 감수하여 온 만큼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산업간 동반성장 측면에서 기업의 농어촌 사회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중소기업이 희생과 노력 속에 대기업이 성장을 거듭하여 왔기 때문에 대기업 10)성과에 대해 공유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기업의 수출을 위해 농업강대국과 FTA를 맺어 농수산업이 희생을 한 만큼 수출 성과 공유 측면에서도 기업들이 농어촌 지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함

다. 사회적 합치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한해 300조원을 넘는다는 삼성경제연구소 연구결과처럼 현행처럼 일방통행식 FTA 체결은 더 많은 갈

9)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발효 : 8건, 협상 진행 9건, 협상 준비 또는 공동 연구 8건)

10) 2004년 처음 도입된 '성과공유제'는 포스코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해 여기에서 발생한 성과를 현금 보상, 단가 보상, 장기 공급권 등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임. 포스코는 성과 공유제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지난해까지 801개 기업과 함께 1794건의 성과공유 과제를 수행했으며, 826억원을 중소기업에 성과보상금으로 제공함

등을 양산하는 만큼 이득 산업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 FTA 체결에 따른 사회적 합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6. 정책제언

1) FTA 무역이득 공유를 위한 농어촌부흥기금 마련

가. 제안배경

□ 수출 산업에 대해 목적세를 부과하거나 법인세 1%를 농어촌 부흥기금으로 적립하여 FTA 피해 산업인 농어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

나. 정책 제언

□ 1안) 법인세 1%를 가칭, '농어촌부흥세'로 적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분야 경제민주화 촉진

- 이를 위해 법인세 1%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함

□ 2안) FTA 체결 이후 수출 산업들에게 수출 증가액의 일정 부분을 '농어촌부흥세'로 적립하여 농림수산식품 분야 경제민주화 촉진

<자금 사용 목적>

i) 농림수산식품분야 R&D 분야 자금 지원 확대 자금으로 활용
ii) 농어민 대상 햇살론을 조성하여 신용 경색(담보력 부족)으로 농어업에 진입 하지 못하는 후계농어인들에게 소액 창업 자금 대출, 기존 소농들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생활자금을 대출 자금으로 활용
iii) 농어민들의 건강, 교육,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사회적기업을 육성 자금으로 활용
iv) 기타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추가지원 자금으로 활용

2) 이해당사자 참여가 보장된 FTA 체결

가. 제안배경

□ FTA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는 이해당사자 및 관련 종사자 참여와 대의기구인 국회 권한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나. 정책 제언

□ 통상절차법 재개정
- 국회와 개시여부 협의, 협상과정 보고의무
- 협상 과정에서 이해(피해)당사자 동행 의무
- 농림수산식품부 대표를 협상 공동 대표로 선임

3) 농민단체-수출기업체 상생프로그램 마련

가. 제안배경

□ 사회적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간 교류 촉진 등을 위해 농민단체와 기업체 상생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나. 정책 제언

□ 농민단체-기업체 상생프로그램 마련
- 기업체 임직원이 농민단체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여 농어업·농어촌 바로 알기를 통한 산업간 교류 확대
- 일정 규모 이상 제조업체 급식당 “우수 국내농산물 사용” 운동 전개
- 농민단체-제조업체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FTA 피해대책 조사, 연구, 각 산업별 상생 방안 마련 토론회 및 연구 활동 등을 진행

4) 관세 수입 농어가소득안정화기금으로 전환

가. 제안배경

□ 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으로 농축수산농가들의 소득 인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특회계가 아닌 농축수산농가 소득안정화 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타당함

가. 정책 제언

□ 농축산물 수입관세 중 50% 수준을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화기금으로 전입하여 농축수산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목적세화 해야 함

- 물론, 농특회계로 관세 수입이 전입되고 있지만 농특회계는 일반 세수입으로 확충하고 관세 수입은 농어가소득안정화 기금으로 전환하여 특정 목적기금으로 활용해야 함